



손 병 석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sonbs@molit.go.kr)

# 2013년 수자원 주요정책 방향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해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토해양부도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관장”하는 해양수산

부로 나뉘어졌다.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건설정책 및 수자원정책을 담당하던 건설수자원정책실은 각각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나뉘어져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제 국토교통부 1차관 직할 수자원정책국은 새롭게 갖춰진 조직체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자원정책”을 모토로 새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동안 주요 수자원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빈발하는 도시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이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10월까지 홍수 피해가 잦았던 계양천 유역 도시(인천·김포)에 대해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우레이더도 '13년 말까지 2기를 추가 설치완료하는 등 '16년까지는 12기까지 확충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간단위 홍수에 보를 시행하는 한편,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위험지도들 '15년까지 전국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제작(총연장 2,332km)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역내 치수시설 간 연계관리, 도시 물순환 촉진, 수자원조사 강화 등 통합 수량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 수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댐-보-농업용저수지 간 과학적 연계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도시홍수 방재대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2.1조원 수준인 연평균 재해피해 규모를 2020년까지 절반 수준인 1조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환경과 조화되는 수자원·하천 관리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소댐 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및 개량, 하천정비 등 인프라 확충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발사업의 프로세스를 先 지역협의 유도,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환경계획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훼손·복개된 하천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기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을 친수·보전·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는 유역별 하천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관리계획은 지자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를 통해 지역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수립하는 한편, 보전·복원·친수지구 등 지구별 관리세부 지침도 마련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관리에 참여하는 국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4대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4대강의 친수여건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변레저·친수 등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 안전성, 수질, 생태계 영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고 검증단 구성, 검증 절차 등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제공 등 객관적 검증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15년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국토부 내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단장: 수자원정책국장)을 금년 4월 중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행사 준비지원을 위한 조직을 완비하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세계물위원회 회장, UN-Habitat 사무총장, ADB 부총재,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제7차 세계물포럼 개시 행사(Kick-off meeting)를 시작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물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물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 및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진행 중인 친수

구역조성사업은 환경과 조화되는 합리적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상업·산업·관광·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강 중심의 지역성장 기반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경인 아라뱃길은 항만·해운 물류를 담당하는 해수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한 물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변공간을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물류·관광·비즈니스 허브이자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관리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변혁기에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수자원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은 자칫 수자원 인프라 투자 및 정책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기후변화로 악화되고 있는 물 관리 여건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환경변화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수자원정책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물관리 정책을 선도한다면 국내 물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해외 물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추진 의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하천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물관리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자원 종사자들이 합심하고 협력할 것을 제언한다. 🌍

